

광주군공항 특별법 ‘국가 지원 난색’ 수정 불가피

기재부 “국가 지원시 부작용 우려” “국가 주도, 기부대 양여방식 상충” 내달 가능사항 조문수정 후 재논의

정부가 21일 국가 주도로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 재정 부담을 들어 사실상 난색을 표명함에 따라 법안 처리에 협로가 예상된다.

법안이 국방위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정부와의 조율 과정에서 국비 지원 등에 대한 상당 부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군 공항 이전에 차질이 우려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 심사 소위를 열고 ‘광주광주군 공항이전을 위한 특별법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을 심의했다.

국방위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 제정안은 군 공항 이전 사업방식을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되, 이전 사업비가 용도 폐지되는 양여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항 이전과 주변지역 지원, 종전 부지개발 사업 등 군 공항이전 사업 전 단계에서 예산의 투입이 가능토록 함에 따라 군 공항의 이전 수요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조문별 재정 수반 요인의 적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사업 추진 주체는 추진되는 사업마다 서로 달라 원활한 사업 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검토 보고했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국비 지원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주도의 사업추진과 초과비용 국방부 부담 등은 법안이 담고 있는 ‘기부대 양여 사업 방식’과 상충되고, 각종 부작용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이전 주변지역 사업과 관련해

진입하는 도로와 철도 등을 국가가 예산을 지원해주어야 하느냐며 사업지연 범위를 문제삼았다. 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해서 이전 주변 지역과 종전 지역까지 면제하는 것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비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검토는 가능하다면서도, 이럴 경우 기부대 양여의 원칙이 깨지는 것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여기에 종전 부지 개발에 국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가 심각하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사실상 국비 지원에 따른 재정 부담을 우려하면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선 상당부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국방위는 3월중 법안심사 소위를 다시 열어 특별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가 국비 지원에 난색을 보이면서 법안 심사과정에서 상당 부분 조문이 수정되고, 상임위 통과까지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송갑석 의원실 관계자는 “송 의원을 기준으로, 국방부와 기재부 의견 가운데 합의 가능 사항과 쟁점 사항을 구분해 수정안을 낼 것”이라며 “다음 소위에서 구체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민주, 이재명 체포안에 “매우 부당” 부결 확인

“27일 표결에 흔들림 없이 반영”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부결에 총의를 모았다. 부결표를 던지기로 뜻을 모았으나, 자율투표를 진행하던 측면에서 당론과 차이가 있는 결정이다.

21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이후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총을 통해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정부의 체포 동의안 제출이 매우 부당하다 점을 의원 총의로 분명히 확인했다”고 말했다.

부결 투표에 관한 당론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는 “따라서 이 대표 체포 동의안 처리 관련 당론 채택 여부는 논의조차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의원 모두 자율적이고 당당하게 투표에 임해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무도한 야당 탄압을 함께 막아내자고 힘을 모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확인된 의원 총의는 27일 본회의 표결 과정, 결과에 흔들림 없이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이 대표 체포 동의안 대응 등을 논의했다. 현장에선 이 대표가 직접 구속영장 청구 관련 입장을 자당 의원들에게 설명하면서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대표는 현 상황에 대해 ‘대선 패배 업보’라는 평가와 함께 “의원들에게 마음의 빛이 있다”는 발언도 했다고 한다. 이후 구속영장 청구 관련 설명, 자유발언 등이 이어졌다는 게 참석자 측 전언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의총에서 “지금 이 역사적 분기점인 것 같다. 제 부족으로 대선에서 패배해 우리 사회 정치, 경제 모든 분야가 퇴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했다”고 했다.

대장동 의혹 관련, 이 대표는 “결국 이재명이 돈 받은 게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계좌 추적은 물론 주변을 다 털어도 나오는 게 없다”고 주장했다. 또 “개발이익 환수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배임죄를 적용한다면 부산 엘시티, 양평 공흥지구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의원들에게 반문했다는 게 박 대변인 설명이다.

이 대표는 “검찰이 제시한 70% 이의환수 기준과 근거가 뭐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정책 결정할 때 검찰에 사전에 물어보고 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발언도 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선 “기업 관련 용도 변경 등 제반 성남시 행정 행위에 어떤 불법, 부당함 없이 모두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전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소화기, 노인복지시설 전달

광주 북구청 노인복지과 직원들이 21일 북구 시화문화마를 주차장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에서 기탁받은 소화기를 관내 노인복지시설에 나눠 주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는 600만원 상당의 소화기 240개를 기탁했다.

김양배 기자

이형석 의원, 730만 교포 고향사랑 기부 참여 법안 발의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사진)은 재외동포의 고향사랑 기부 근거를 명시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관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부금을 모금하고, 기부자에게 세액 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현행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른 모금 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 국내 거주 여부나 국적에 제약 없이 가능하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기부금 온라인 홈페이지인 ‘고향사랑e음’엔 기부자의 주소지 확인 과정에서

주민등록을 요구하고 있어,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재외동포들은 기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해외동포 등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담은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법이 제약을 두지 않았음에도 시행령과 시스템이 만든 절차적 장벽으로 인해 730만 재외동포가 기부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행안부의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명당(穴)을 만드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 (6개월 과정)
· 일 시: 2023. 3. 8(수) 오후 7시
· 장 소: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 478-1) (산수오거리-무등산방향입구 우측2층)
· 수강료: 풍수+사주 20만원 (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 시: 2023. 3. 1(수) 오후 7시.
· 장 소: 상동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 대 상: 누구나 (선착순 00명)

컨설팅 (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공개
- 기강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택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 (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 (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 (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2246-1508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받아 드립니다

돈

빌려준 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료 그 동안 쌓인 다양한 노야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안채권, 삼가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

010-5679-0990, 062)714-2846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고 제2023-387호

광주광역시 제1음식물폐기물자원화시설 확충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광주광역시 제1음식물폐기물자원화시설 확충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39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2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 광주광역시 제1음식물폐기물자원화시설 확충사업
○ 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대길 770-1(본덕동) 일원
○ 사업규모 : 기존 음식물사료화시설(150톤/일) + 신규 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시설(70톤/일)
○ 사업시행자 : 광주광역시
○ 승인기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2.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23. 2. 22.(수) ~ 2023. 3. 23.(목) (20일간,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초일 불산입)
○ 공람장소 비치 : 열람부,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및 요약서, 주민의견 제출서

3. 주민의견 제출 시기 및 방법
○ 제출기간 : 공람 시작일로부터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 (2023년 3월 30일(목)까지, 초일 불산입)
○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 양식(「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평가서 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을 작성하여 공람장소로 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등록

4.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구분	일시	장소	비고
광산구	2023. 3. 8.(수) 14:00	광주 광산구 동곡동 행정복지센터	

주) 설명회 개최 당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감염 여부 등에 따라 설명회장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참석이 어려우신 분은 광주광역시 및 광산구·서구·남구·나주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요약서 등을 참조하시고, 의견 제출시에는 양식에 따라 서면 작성하여 각 공람장소로 직접제출 또는 우편발송 부탁드립니다.

5. 기타
○ 본 공고문은 광주광역시 및 광산구·서구·남구·나주시 홈페이지에 게시, 서울신문 및 전남일보(2023.2.22.)에 게재하였으며,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일정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하지 않고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사업 관련 사항은 광주광역시청 자원순환과(☎062-613-1683), 공람 관련 등 기타 사항은 광산구청 기후환경과(☎062-960-84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공람장소	비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구청 (기후환경과), 동곡동 행정복지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서구청 (기후환경과), 서창동 행정복지센터	
광주광역시 남구	남구청 (환경생태과), 대촌동 행정복지센터	
나주시	나주시청 (환경관리과), 노안면사무소	